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현지현 기자 (대구본부) | 승인 2024.07.01 23:17

대구는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하라!
불법파견 근절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구속하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및 헌법소원 기각!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대책 마련! 불법파견 근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판매업체인 '아리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참사가 일어났다. 해당업체는 불법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3개월전 소방당국으로부터 '급격연소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41.6연대가 7월 1일(월) 13:00, 한일CGV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아리셀은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했지만 정직원은 43명으로 신고되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피해갔고, 노동자들은 어떠한 산업안전교육이나 화재시 대피방법 등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불법파견, 외주화가 죽음을 부른다고 수없이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파견을 더욱 확대하려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적용을 아직도 얘기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업주의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발언했다.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서 23명의 사망자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밝혀져 충격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재사망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노동안전대책의 미비함과 아무리 위험한 현장이어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김희정 위원장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김희정 위원장은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리셀이 특별히 악독한 사업주라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를 부품 갈아끼우듯 사용하고, 이주노동자를 그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저임금 고위험 업종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확대공급하는데 주력해온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 주범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터에서 과연 정주 노동자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연한 불법파견을 그대로 둔다면 제 2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대구4.16연대 박신호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했지만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와 같은 후진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상실감을 넘어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정부의 산업재해에 대한 현장의 지도와 감독이 부실하고, 규제를 통한 안전보다는 자본의 이익이 먼저인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국민이 나서서 자본이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헌법 소원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왼), 기자회견문은 노동당 대구시당 정철효 위원장(가운데),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오)

기자회견문은 노동당 대구시당 정철효 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지역 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해야함’과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긴급화재 안전점검이 점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들이 현장에 반영되고 개선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함’을 요구했다. 또한 배터리 1~2차 전기관련 업체 뿐 아니라 평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고있는 ‘고위험 PSM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을 요구했다. 대구광역시는 이주노동자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안전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즉각 시행해야함도 내용에 담았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4.16연대는 오늘 7월 1일(월)부터 7월 5일(금)까지 한일CGV 앞에서 분향소를 운영한다. 7월 5일(금) 19:00에는 추모문화제가 예정되어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및 헌법소원 기각!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대책 마련! 불법파견 근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판매업체인 ‘아리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참사가 일어났다. 해당업체는 불법과건(「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3개월전 소방당국으로부터 ‘급격연소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우리는 죽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9.2%, 2023년 10.4%, 올해 3월까지 11.2%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비율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이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각 국의 언어를 반영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 등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아무리 위험한 환경이어도 마음대로 이직할 수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뜯어고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중대재해참사를 막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해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리셀의 상시노동자수는 43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해왔던 정부여당의 뜻대로 되었다라면 23명이라는 사망노동자를 낸 참사임에도 여러 법적 책임과 처벌은 면했을 것이다. 이번 참사는 중소기업청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이 기각되어야함과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아리셀 대표와 원청 기업인 에스코넥에게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한다.

이번 참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책임도 묻지않을 수 없다.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했던 메이셀은 직업소개업 등록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파견허가도 받지 못했다. 메이셀은 업체에 인력만 공급할 뿐 얼굴도 모른다면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애초에 아리셀은 파견금지업종으로 불법과건에 해당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파견법 위반 유형별 진정 현황에서도 파견금지업종에 대한 파견 및 무허가 파견이 57.9%(2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종결되며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불법과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결과 현장의 위험만 커졌다. 이번 중대재

해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은 102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3명만을 직접고용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이 이행해야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과건을 엄단하고 뿌리뽑았다면 이 같은 참사와 위험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역 내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해야한다.

지난 4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진행했던 대구지역 노동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1/3가량인 33.4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3.57%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대구 또한 안전할 수 없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또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5일,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회의가 진행됐으며, 대구소방안전본부는 7월 9일까지 지역 내 배터리 1-2차 전지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화재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아리셀 또한 소방당국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긴급 화재안전점검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들이 현장에 반영되어 개선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배터리 1-2차 전지관련 업체 뿐 아니라 평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 PSM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이주노동자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안전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즉각 시행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구속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불법과건 근절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24년 7월 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현지현 기자 (대구본부) dsxc@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